

안전 ■ 국민 ■ 안정 ■ 예측 ■  
■ 대비 ■ 일상 ■ 국가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2023.12월





## BI 소개

위의 5개의 원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중앙부처-지자체-경찰-소방-국민 등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다시는 인파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2주마다 개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안전대책의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통해 달라진 변화,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상 속 안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일동

## CONTENTS

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1
-------------------------	---

---

II.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2
-------------------	---

---

### II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책적 변화

▶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변화	3
▶ 강화된 ‘인파안전관리’의 단계별 모습	4
<b>[변화1]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b>	5
※ <참고> 인파안전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9
<b>[변화2] 현장대응역량 제고</b>	10
<b>[변화3]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체계 강화</b>	12
<b>[변화4]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b>	14

---

IV.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5
-------------------	----

# I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 추진배경

- 이태원 참사(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마련(23.1.27.)  
\* 추진기간 : 2023~2027년(총 5년)

##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기본 방향	「관점」 전환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방식」 전환 디지털플랫폼·과학 기술 기반, 전 사회 구성원 참여	「행동(실천)」 전환 온 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 5대 전략 +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략	주요 과제 내용
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위험요소 상시 발굴·예측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li><li>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li></ul>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li><li>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li></ul>
③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고도화</li><li>디지털 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강화 등</li></ul>
④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li><li>심리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li></ul>
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li><li>지역주민 참여 기반 안전신고 활성화 등</li></ul>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 종합대책 과제들로 단계별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제시

# II

##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국민·국회·전문가의 의견 반영한 대책 마련

- 법정부TF('22.11.~), 국정조사\*, 국민·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23.1.17. / 55일간)
  - \*\* '안전신문고'(1,672건, ~12.31.) 및 'ON국민소통(220건)'을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 행안부 연두업무보고(1.27.), 중앙안전관리위원회(3.28.)를 통해 대책 확정

###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차관급 이상 주재 점검회의 총 16회 개최/월 평균 2회)

- 격주 단위 법정부 종합대책 점검회의 운영(총 14회, 3.8~11.20. 기준)
  - ※ 행정안전부 장관(1회)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13회)
-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6.29., 10.25.)

### 종합대책 현장 안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

- 지자체 관련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 요청 및 점검
  - ※ 중앙지방정책협의회(3.17.), 시도안전실장회의(6.14., 9.21.) 등
-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결하는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실시('23.5월~8월)
  - ※ 자치단체장·부단체장 안전 현장점검 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홍보(총 16개 시도 참여)

일상안전 릴레이 실시 내용



### 주기적인 추진상황 공개

- 행안부 누리집 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 구축(3.3.~)
- 점검회의 개최, 세부계획 발표 등 정책 계기마다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 현재 웹페이지에 정책자료 12건, 보도자료 160건 등 총 172건 게시(12.31. 기준)

### III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책적 변화



###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변화

#### 변화 01

####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정착했습니다.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밀집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하는 새로운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변화 02

#### 기관 간 소통·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기관 간 공동대응 활성화 등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변화 03

####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공유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활용을 통해 재난 현장의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공유하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변화 04

#### 재난피해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변화된 재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난피해의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신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강화된 ‘인파안전관리’의 단계별 모습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경찰·소방·지자체 등 합동으로 사전 안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 [ 예시 ]
- 주최자 불분명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의무 확대
  - 인파안전관리 강화 지침 배포(3회) 및 현장점검 강화
  -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합동 사전 안전대책 수립 등



다양한 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합니다.

- [ 예시 ]
-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 지능형 CCTV 관제
  -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확대



경찰·소방·해경·지자체 간에 위험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빠르게 인파밀집 위험에 대처합니다.

- [ 예시 ]
-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협력관 배치
  - 공동대응 시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개시
  - 구조·구급 관계기관 합동 불시 구조·구급 훈련 신설



피해자·유가족·현장목격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수습 조치를 실시합니다.

- [ 예시 ]
-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한 대상별 심리회복지원
  - 대형재난 시신·유류품 조치 가이드 마련·교육 등

## 변화1

#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

## 인파 안전관리 제도 및 점검체계 개선

### ● 인파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 추진

#### 《 주요 법안 내용(「재난안전법」 제·개정 내용) 》

-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장후 발견시 경찰관서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장에 통보 ('24.6.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24.7.17. 시행 예정)

### ●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13종) 심의 및 개정 완료(10월)

\* 공연장·경기장, 도시철도, 학교, 지진 등 인파밀집상황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 인파사고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구체화, 인파사고 위기징후와 감시수단 추가 등

###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 마련·통보(3회)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1.18.), 「지역축제 수용한계 초과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6.21.),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협조사항(9.26.)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조치

#### 《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협조 요청 사항(9.26.) 》

- 인파밀집 행사\* 시 부단체장 중심 '인파사고예방단' 가동  
\*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100개소) 내 행사 대상
- 주최자가 없지만 인파밀집 우려가 있는 지역축제 발굴(매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 실시  
\* 순간밀집 1000명 이상 등(지자체 조례로 결정)

### ● 행안부 참여 관계기관 합동 지역축제 현장점검 실시

\*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ex. 진해군항제, 부산불꽃쇼, 대규모 콘서트 등)

▶ 행안부 주관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현장점검(전년 동기 대비 123%↑):

52건('22.1~12월) → 116건('23.1~12월)

## 《 서울불꽃축제(10.7.) 대비 안전관리 추진사례 》

- (합동점검) 축제 전일 및 당일 행안부·경찰·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 (인력배치) 민간·경찰·소방·행정 등 총 6,648명의 안전인력 배치(전년 대비 26%↑)
- (교통통제) 여의도 한강공원 권역 교통을 통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사전 안내
  - 행사 전후 행사장 주변 지하철·버스 운행 확대 및 여의나루역 등 무정차 통과
- (시설안전) 진입로·계단·경사지 등에 안전확보 조치



## ICT 기반 위험요인 사전 파악

- 실시간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현장 적용
  -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30개소 시범 운영('23.10월) → 전국 100개소 적용('23.12월)

###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도 》



- 신속한 위험요인 감지를 위한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현업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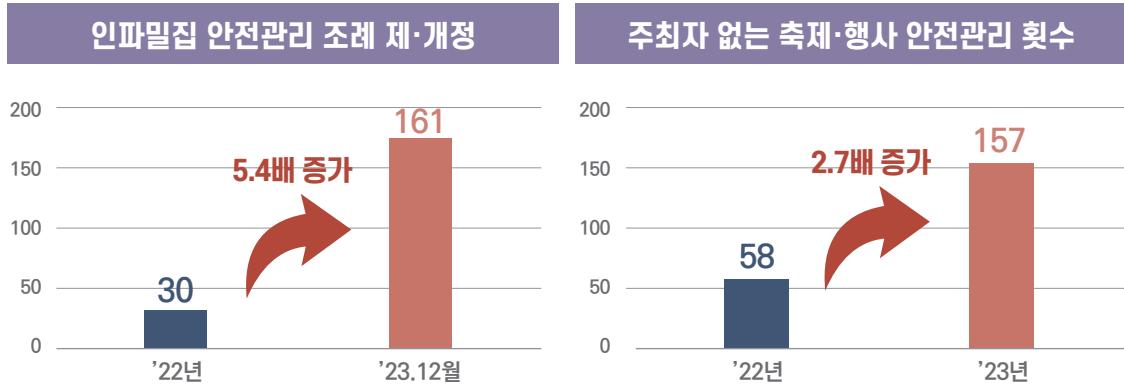
\*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①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②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 요원에게 제공

▶ 전체 신고 대비 반복신고 감지 비율: 1.25%(1분기) → 2.5%(2분기) → 7.6%(3분기) → 8.1%(4분기)

## 지역축제에 대한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사전 안전관리

- ▶ 인파밀집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30건('22년) → 131건('23.8월) → 161건('23.12월)
-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횟수: 58건('22년) → 157건('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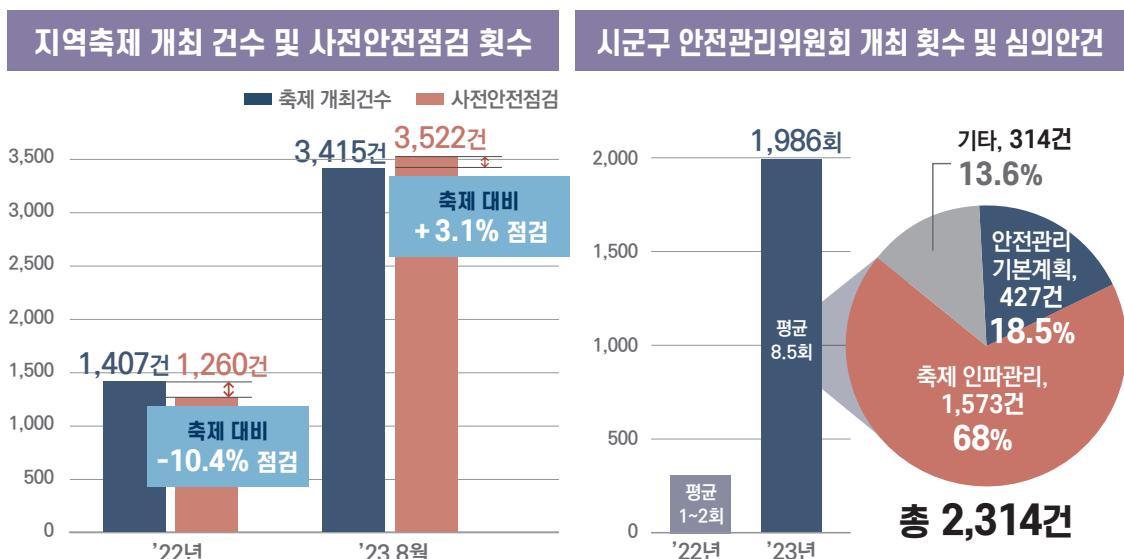
-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 ▶ 지역축제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비율 : 89.6%('22년) → 103.1%('23년)
- ⇒ 경찰-소방-지자체 등 합동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일부 대규모 행사는 2회 이상 합동점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 축제 안전대책 심의

\* 자치단체장 주재 경찰, 소방, 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관리협의체

- ▶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횟수 : (기준) 평균 1~2회 → ('23년) 평균 8.5회
- ▶ 심의안건 비중 : 전체 안건 중 68%가 인파안전관리 관련(총 2,314건 중 1,573건)



● 소방·경찰·지자체·응급의료 등 구조·구급 관련기관 합동 구급 불시출동 및 대응훈련 신설

▶ 구조·구급훈련 : 기존 ①긴급구조종합훈련, ②구급대응훈련 실시('22년)

⇒ 개선('23년) : ①긴급구조종합훈련과 ②구급대응훈련 통합 및 ③구급 불시출동훈련 신설

☞ 중앙 및 시도별 2회 이상 구조·구급훈련 실시

## 인파사고 관련 수습 및 피해 최소화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마련 및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주요 기관별 심리지원현황('22.11월~'23.12월)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행안부)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소방청,경찰청)	
일반국민 699명  	유가족·부상자·재난현장경험자 등 7,388명  	소방 공무원 1,291명  	경찰 공무원 등 1,148명  

※  = 1,000명 단위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시신·유류품 확인 절차 개선

※ 「검시표준업무 처리지침」개정(4.17.),

「대형재난 변사사건 시신·유류품 조치 가이드」마련(4.24.) 및 교육 완료

《 대형 재난 변사사건 시신 확인 절차 》

- 다수의 사망자가 임시 영안소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 신원확인 전까지는 출입 통제가 원칙으로 통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되,  
현장 상황상 유족에게 1:1 안내가 가능할 경우 시신 확인 조치
  - 신원확인 후, 담당 형사는 유족과 동행하여 별도 공간에서 시신 확인
- 사망 장소를 벗어나 병원(장례식장)으로 후송된 경우
  - 신원확인 전이라도 사실상 유족임이 확인된 경우, 담당 형사 동행 하에 신속하게 시신 확인

## 참고 | 인파안전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 [ 대전광역시 ] “대전 0시 축제” 안전관리 추진

“연인원 110만명이 참여한 축제에서 정부의 강조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체 시책을 더해 입체적인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 마련·운영”

- (계획심의) 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재확인 점검(double-checking)  
\*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거쳐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에서 재점검 등
- (기관 협력체계 가동) 경찰·소방·민간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통해 사전점검, 유관기관 협동으로 행사·안전·교통·소방·치안 등 5개 분야별 상황실 운영
- (철저한 안전관리) AI 활용 CCTV 관제, 일방통행로 설정, 충분한 경찰력 배치, 폭염대책 마련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 제주특별자치도 ]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특별과정” 운영

“인파안전관리 유관 기관(자치경찰·소방·보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파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시책, 행동요령 등을 상호학습하는 교육과정 신설 운영”

- (내용) 유관기관 상호 교육\* 및 현장사례,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진행  
\* (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이해, (자치경찰) 다중운집 행사 운영사례  
(소방)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대처 실습(소화기 사용, 응급처치 등)

### [ 경상남도 ] 드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사람이나 차량이 가기 어려운 축제·행사, 물놀이 명소 등에 드론을 활용(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 등에 연결)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철저”

### [ 기타 ]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인파안전관리

-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축제) 360도 이동식 대중경보장치 도입
- (경북 포항시 포항국제불빛축제) DJ폴리스 운영(경찰관이 승합차 위에서 인파밀집도를 살펴보며 안내방송 등 인파통제)
- (경기 시흥시 거북섬 해양축제 및 밤페스티벌) CCTV가 부족한 행사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부착형 이동형 CCTV 설치·운영



(경북 고령군) 대중경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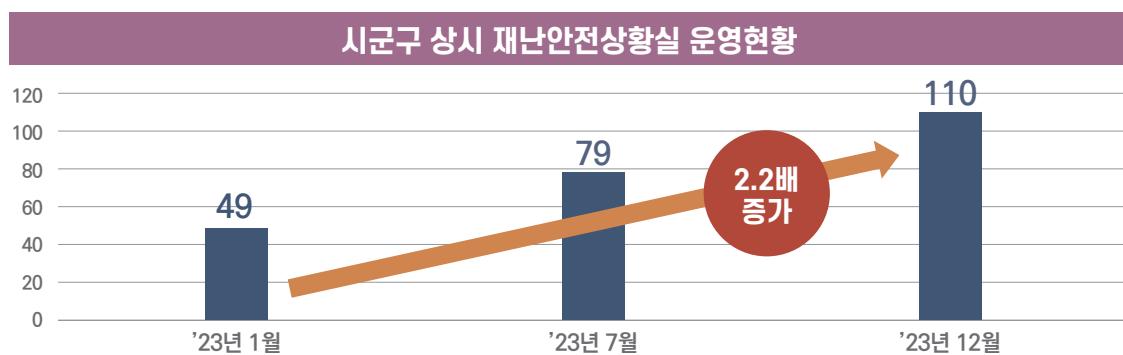
(경북 포항시) DJ 폴리스



(경기 시흥시) 이동형 CCTV

**변화2****현장대응역량 제고****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기능 강화**

-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한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확대(연초 대비 2.2배 증가)
  - ▶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 49개('23.1월) → 79개('23.7월) → 110개('23.12월)



- 경찰·소방 공조 강화를 위해 각 상황실에 협력관(각 4명) 배치('23.5월)
  - \* 현장출동 안전조치, 교통통제, 소방활동 공유 등 상호 협조상황 실시간 파악·지원

**《협력관 파견 우수사례》**

- '23. 5. 26. 대구공항 여객기 착륙 中 강제 문개방 관련 119신고(승객 5명 호흡곤란) 접수 상황을 경찰청과 즉시 공유 ⇒ 경찰은 피의자 현장 검거, 소방은 인명구조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

-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조정·총괄하는 구급지휘팀 운영

**《구급지휘팀이란?》**

- (역할) 재난 시 재난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총괄, 다수사상 구급 지휘,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지원 관리 등
- (구성) 구급역량을 갖춘 구급대원 출신 인력으로 구성
- (운영현황) 대구(5.1.), 서울(6.1.), 충남(7.10), 전남(7.17.)에서 시범 운영 중
  -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 확대 계획 검토
- (운영효과)
  -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출동·이송자원(소방인력, 민간의료인력, 사설응급차 등) 간 역할 조정 및 지휘 총괄
  - 재난의료지원팀 도착 전 신속하게 임시의료소 설치·운영

## ● 재난 시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강화

### - 「응급의료법」상 DMAT의 설치·업무 등 법적 근거 명확화

※ DMAT 설치, 업무 범위, 인력 구성, 출동 방해금지 등을 「응급의료법」 상 명확히 규정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 DMAT의 적극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및 현장응급의료종사자 면책 확대 추진

#### 《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란? 》

- (역할)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 (구성)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총4명)

## 경찰-소방-해경 위험상황 공동대응 체계 혁신

## ●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 의무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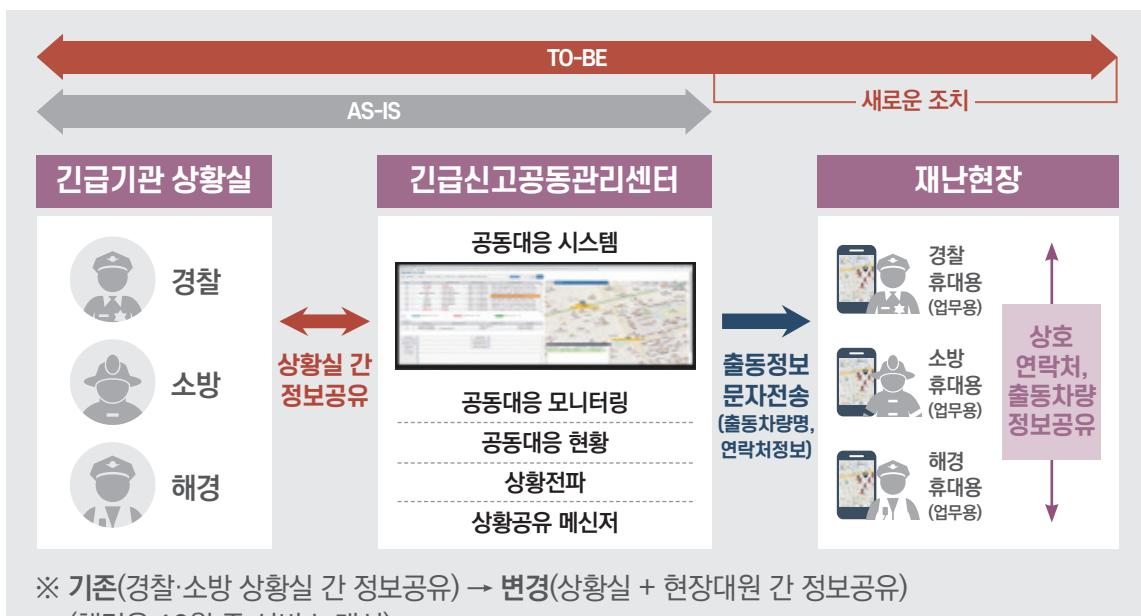
\* (행안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경찰)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소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해경)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개정 추진

## ● 공동대응 시 상황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개시(10.24.~)

\* 공동대응 시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명, 연락처 정보)를 업무용 휴대폰으로 자동문자 전송

⇒ 현장에서 상대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여 빠르게 대응하도록 정보 지원

#### 《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체계도 》



**변화3**

##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체계 강화

### 디지털·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체계 본격화

-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3.13.~) 및 지속적 고도화 \* [www.safetydata.go.kr](http://www.safetydata.go.kr)

▶ 제공 데이터셋 수 : 10개('22년) → 20개('23년) → 27개('24년)

#### 《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사례 》

- 강릉산불(4.11.) 시 「재난안전데이터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 실시간 공유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2차 피해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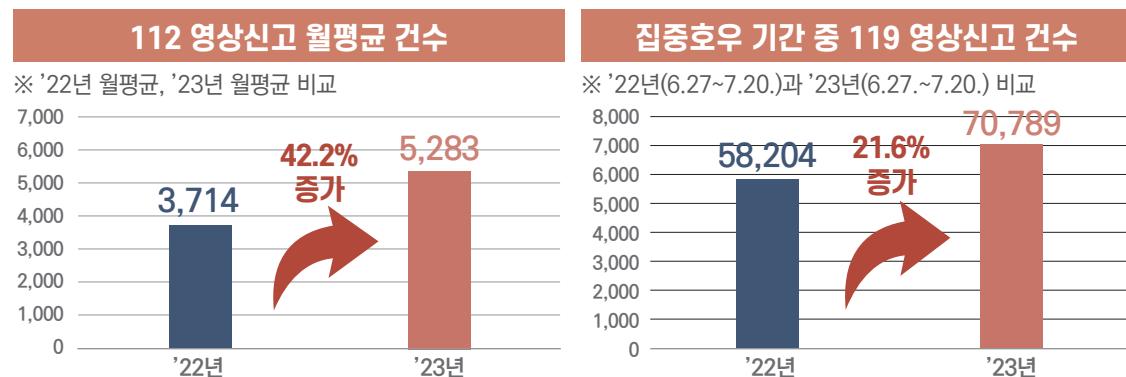
- 산사태·산불 등 각종 재난 예측 시스템 고도화

\* 예측정보 제공시점: (산사태) 기존24시간 전→ 개선48시간 전, (산불): 기존3일 전 → 개선7일 전

###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

- 위험상황의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 ▶ 112 영상신고 월평균 신고 건수(42.2%↑): 3,714건('22년) → 5,283건('23년)
- ▶ 119 영상신고 월평균 신고 건수(64.2%↑): 256,453건('22년) → 421,023건('23년)
- ▶ 집중호우기간<sup>(6.27.~7.20.)</sup> 중 119 영상신고 건수(21.6%↑) : 58,204건('22년) → 70,789건('23년)



#### 《 119영상신고 활용 우수사례 》

- (당시상황) 7월 15일 새벽 5시 55분, 충남 공주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 발생
- (신고내용) 마을 도로에 물이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산사태 위험도 있다며 현장 상황 119 신고
- (조치사항) 영상통화로 상황을 확인 후 행동수칙을 안내 및 유관기관에 위험 상황 전파

●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개발·운영('23.12월~)

\* 환자 생체징후, 중증도, 현장 처치사항, 환자 이송정보 등

《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주요 기능 》

- (현장관리 기능) 전국 통합된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사상자 정보관리 및 공유  
→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 이송
- (환자관리 추적기능) 구급일지 생성 시 구급일련번호를 응급환자번호(EPN)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자정보 이력 확인 및 의료정보 공동활용



● 지역별·상황별 맞춤형 재난상황 알림

- 극한 호우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수도권 6월, '24년에는 전국 적용)

\* 극한호우(50mm/1hr, 90mm/3hr 호우 동시 관측)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험상황 신속 전파를 위한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중

\* 기존 분산되어있던 예·경보 시스템을 동시에 발령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예·경보시스템 예시: 라디오(음성), 인터넷포털, 마을방송시스템 등)

▶ 8개 지자체 '예·경보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 완료(9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실시('24년),  
전국 보급('25년~'26년)

## CCTV 영상정보 활용 강화

● CCTV 영상 정보를 재난 예방·대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3.12월)

\*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시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부여

● 효과적인 지능형 CCTV 전국 확산을 위해 최적화 통합 모델 연구(9월~)

\* (기존)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최신기술활용 분석기술 개발 및 자체 활용

⇒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경찰·소방·행안부 중앙재난상황실 및 타 지자체와 연계·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통합모델 필요

## 변화4

#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환경변화에 맞는 피해지원 강화

- 사회재난도 보장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1.1.)
  - ▶ 사회재난 사망특약 가입 지자체(전체 중 77.63% 가입): 177개('23.12월)
-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 상향(6.13.)
  - ▶ 주택지원금(2.25배↑) : (기존) 1천6백만원 → (개선)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
-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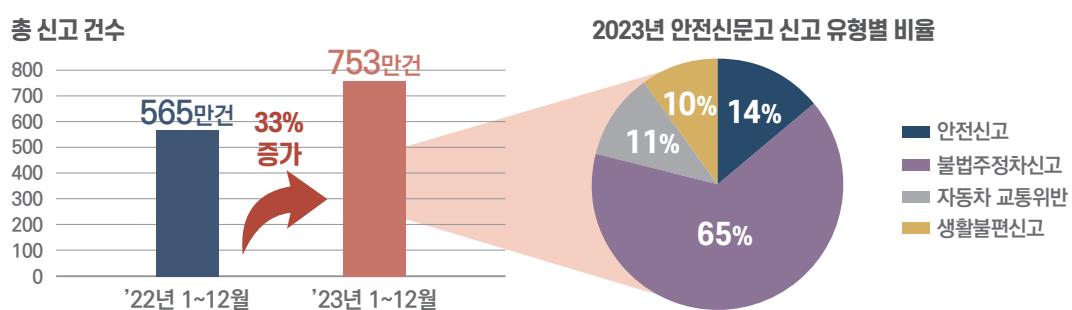
## 객관적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8.18.)
  - \* 민간위원장 등 3개 분과(건설·교통, 화재·환경, 보건·사회기반) 총 28명으로 구성
- 조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 고도화 BPR/ISP 완료(7.14.), 고도화 사업 추진(~'25.)

## 국민의 안전참여 활성화

- 안전신문고 안전정책 제안 기능 신설('22.11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23.12월)
  - ▶ 안전신문고 안전정책 제안 건수: 8,704건('22.11월~'23.12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분야 계속 확대 및 높은 국민관심으로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크게 증가
  - \* 자동차·교통위반(4월), 불법숙박(5월), 빗물받이 막힘(6월), 인도 위 불법 주정차(7월)
  -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33%↑): 565만건('22.1~12월) → 753만건('23.1~12월)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및 신고 유형 비율



# IV

##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 1. 기후위기 대응 안전시스템 과제 보완 추진

- 극심해진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3.10.4. 구성)

\* 기후위기 진단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6개 분과 6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관련 대책과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23.12.7.)

\* <예시> - 주택 인접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 발굴 확대

- 위험구역 지정 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 주민대피체계 마련

⇒ 보완된 기후변화 관련 과제들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23.12월~)

### 2. 종합대책의 “현장작동성 제고” 노력 계속

- 주기적 정책점검을 통한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책 과제들의 현장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
- 현장작동 부족 과제들에 대해서는 과제내용을 보완하고, 각종 교육·훈련(예: 안전한국훈련, READY Korea훈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안착 노력 강화

###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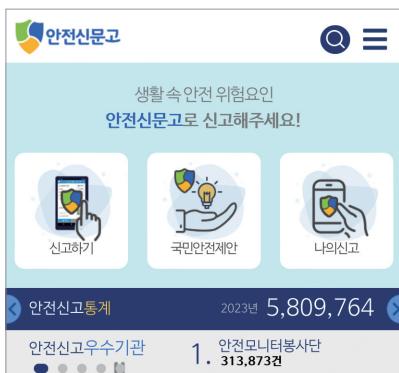
- 인파사고 안전관리, 과학적 재난관리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주요 방향에 맞는 적극적 입법을 통한 안전 제도화 및 국회 통과 노력

#### 《관련 주요 법률안(「재난안전법」) 예시》

- 주최자 불명확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예방관리('24.7.17. 시행 예정)
- 지자체 관제센터 CCTV를 재난관리 업무에 상시 공동활용 근거 마련(행안위 계류 종)
- 재난·안전관리 목적으로 국민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 신설(행안위 계류 종)

- 국민 제안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현장점검 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국민안전 관련 누리집 및 앱(App)



### 안전신문고

-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 및 생활 속 안전정책 제안
- \* 신고 대상: 생활 속 안전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 및 불편사항



[www.safetyreport.go.kr](http://www.safetyrepor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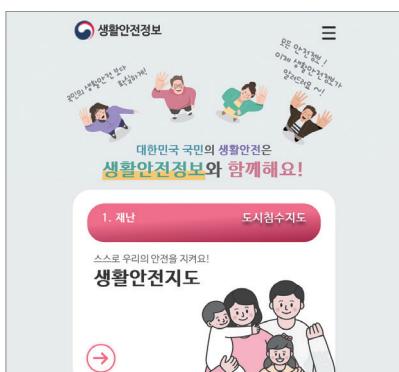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 6개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콘텐츠 제공
  - 안전체험관 소개
  - 안전문화 활동 소식 안내 등



[kasem.safekorea.go.kr](http://kasem.safekorea.go.kr)



### 생활안전정보

- 내 주변의 위험과 사고이력, 안전정보 등을 지도형태로 제공
  - 생활안전지도 / 지역안전등급 / 시설물안전정보



[www.safemap.go.kr](http://www.safemap.go.kr)



### 안전디딤돌

- 긴급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무더위쉼터 및 각종 재난뉴스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제공

※ 앱 스토어를 통해 설치 가능

- 구글 Playstore(안드로이드), iOS App Store(애플)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인쇄 일 | 2023년 12월

발행 일 | 2023년 12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전화 | 02-2100-3399

